

대학도서관에 버젓이 꽃혀있는 5·18 왜곡 도서

판매·배포 금지 전두환 회고록·지만원 책 13~14개 대학서 열람·대출 국회전자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등에도 비치...왜곡 방지 대책 시급

법원이 판매·배포 금지 처분을 내린 5·18 민주화운동 왜곡 도서들이 전국 도서관에서 여전히 열람,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책이 시급하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31일 전국 대학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법원의 판매·배포 금지 결정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와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지만원)에 대한 열람·배포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기념재단은 전두환 회고록의 경우 전국 450여 곳 대학도서관 중 14곳에서, 지만원의 책은 13곳에서 비치돼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는 지난 2017

년 8월 4일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났고 문제가 된 항목(33개)을 검은색으로 칠해 재출판한 책도 지난 2018년 5월 15일 판매·배포 금지 결정을 받았다.

지만원의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는 지난 2월 19일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경희대 국제캠퍼스(중앙도서관), 공주대 천안캠퍼스, 국민대(성곡도서관), 남부대, 백석문화대, 아주대, 여주대(여암학술정보관), 제주대(중앙도서관), 춘천교대,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한남대(중앙도서관) 등 14개 대학 도서관에서 전두환 회고록을 빌려볼

수 있다. 일부 도서관에서는 전자책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 '북조선...'는 경북대, 경상국립대, 고려대, 고려대 세종캠퍼스(학술정보관), 부산대, 성균관대(학술정보관), 세명대, 아주대, 연세대(학술정보관), 전남대, 전북대(중앙도서관), 충북대(중앙도서관), 한경대 등 13개 대학 도서관에서 책 내용을 열람하는 게 가능하다.

국회전자도서관(독도·통일자료실)·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도 비치·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기념재단측 설명이다.

기념재단은 5·18을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도서의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도,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열람·대출 등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5·18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등 5·18에 대한 왜곡·편향된 내용 등을 엿볼 수 있는 지만원의

'5·18 팩트만 증명된 북한특수군', '5·18분석 최종보고서 : 12년 연구의 결과물', '솔로몬 앞에 선 5·18',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1-4, 상·하' 등은 법원의 판매·배포 금지 결정을 받지 않아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이 미안마 민주화운동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5·18을 약의적으로 왜곡하고 그 의미를 격하하는 시도는 여전히 있다"면서 "출간 때부터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던 도서를 구매하고 비치·열람케 한 것은 공공 기관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전국 대학 도서관과 국립 도서관, 온·오프라인 서점 등에 5·18 역사왜곡 도서의 대출과 판매를 중지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성폭력 피해 신고하고... 10대 소녀 극단적 선택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청소년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지난 3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A(17)양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A양은 지난 31일 새벽 3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양은 부모에게 메모 형식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양은 지난 29일 밤 인근 지역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다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 추가로 성폭력 범죄의 정황을 발견해 A양 등 4명에 대한 조사를 해바라기센터로 의뢰해 1차 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이후 다음날인 31일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귀가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과 함께 있었던 3명을 불러 신고 내용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봉현 술 접대 의혹' 검사 3명 징계 요청 법무부, 대검에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 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대검에 A검사 등 3명의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가 있어야 진행된다.

이들은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받은 의혹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혐의가 뚜렷한 A검사만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다른 두 검사는 술자리를 일찌감치 떠난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수북이 쌓인 불법 현수막 지난 31일 오전 광주 남구청 도시재생과 직원들이 양림교 부근에 불법으로 내걸린 현수막들을 철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중국산 소화기 약제 섞고 국내산 속여 판 압제업체 광주세관, 2개사 101억 상당 적발

중국산 분말소화기 약제를 섞어놓고도 소화기 약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자칫 화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중국산 분말 소화기 약제를 국내산 재할용 소화약제와 혼합해 사용하면서 소화약제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표시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소화기는 85만대로, 101억원 상당에 달한다.

광주본부세관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소화기 안전성 및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진행했다.

해당 소화기는 사용기간 10년이 경과한 폐소화기에서 소화약제를 추출해 재할용 공정을 거친 친환경 ABC 분말소화기다.

이들 업체는 약제가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경우 모든 국가의 원산지를 구성 비율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원산지를 한국으로만 허위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본부세관은 또 해당 업체들이 재할용 소화 약제 100%를 사용하는 것으로 속여 형식승인을 받은 사실을 파악, 소방시설법 위반 사항을 관련 기관에 이첩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광고 왜 안줘” 이틀새 92차례 전화 협박 인터넷언론매체 기자 집행유예 선고

던 직장과 달리, 예전 직장은 급여 없이 광고 수익을 영업해온 기자와 대표이사 나 나눠 갖는 형태였다.

검찰 등은 A씨가 영광군 광고를 이전 직장을 통해 수수하면 해당 직장의 영광군 출입기자로 등록한 부인에게 수익금이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정한 광고비 집행을 요구했을 뿐 '협박'이 아니라고 맞섰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공갈 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적 '협박'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영광군이 법성포 단오제 광고를 다니는 회사에만 주고 예전 직장에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청 직원에게 전화, 광고를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군수에게 알려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것 처럼 말한 점, 군청을 직접 찾아가 탁자를 내리치면서 반복해 요구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이를 동안 92차례 직원의 직장·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요구한 점, 피해 직원이 A씨 방문 직후 과호흡 증세로 입원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공갈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하고 갈취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 모집니다

▶ 시행사, 대표 김양덕

▶ H. 010-2928-0202